

尹 “보편복지에 과학적 접근 필요… 이념·정치 등 개입 안돼”

尹 대통령, 복지·고용 등 업무보고
“노동개혁, 수요기반에 맞추고
노노간 비슷한 보상체계 있어야”

“감염병 대응에 국민 건강만 생각
외교·경제통상·정치 고려치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에 대해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복지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며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해 우리의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 복지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라며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복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의 공익성에 따라 개념을 설정하고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에 선순환을 줘야 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한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등이 개재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부를 향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중 최우선으로 꼽는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져보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된다”며 “그리고 노사 간뿐만 아니라 노노(勞勞)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보상 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를 향해서는 “인력과 예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며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에 대해서도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많은 규제들을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며 “불필요한 규제나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걸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윈스톱으로 할 수 있고,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바이오산업, 의학 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질병청을 향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며 “어떤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 지간에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1면 ‘경쟁력 입증한 K산업’서 계속

“플랫폼 기업 지원할 것”… 中, 빅테크 규제 마침표

● **차이나 뉴스&리포트**
인민은행 “14개 기업 특별단속 완료”
지난해 9월 20일 이후 규제회의 안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마윈의 경영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지분구조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립자인 마윈. /AP·뉴스시스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2년 이상 이어진 단속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9일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 귀슈칭 공산당 서기는 “14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 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 단속은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 주석이기도 한 귀 서기는 “향후 이 부문에 대한 감독은 정상화될 것이며, 플랫폼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급 규제 당국자가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홀딩스를 포함한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을 묶어낸 대규모 단속을 끝낸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빅테크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 나섰다. 대상도 전자상거래는 물론 차량 공유와 온라인 교육 등까지 광범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대를 모았던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는 중단됐고, ‘중국판 우버’인 디디 글로벌은 미국 증시에 이름을 올린 지 다섯 달만에 스스로 상장 폐지를 선택해야 했다. 알리바바에게는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으며, 음식 배달업체인 메이투안은 배달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경기 침체에 규제까지 겹치면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류허 부총리가 지난해 3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가능한 빨리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하

며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5월에는 인민은행이 해당 기업들에 대해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뒷받침했다.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규제 정상화,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 등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14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모두 소집한 규제 회의는 지난해 9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당시 추가 규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대적인 규제 여파는 여전하다. 앤트그룹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지분 구조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부스 최고 인기 BMW와 전장 협업 기대

실제 싸인까지는 아니어도 추후 협력을 염두에 둔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이 국내 업체 부스를 둘러보는 것은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적지 않은 논의를 이어갔다는 전언이다.

삼성전자 부스는 올해에도 최고 인기를 누렸다. 현장을 방문한 국내 기업 총수는 물론, 글로벌 기업에서도 기술력을 확인하고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올리버 집세 BMW 회장은 삼성전자와 하만인 개발한 ‘레디케어’ 등 전장 기술을 확인하고 끈끈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BMW가 차세대 플랫폼을 공개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전장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박정호 부회장이 웰컴 CEO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폰용 AP에 이어 차량용 반도체와 IoT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웰컴에 메모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기대했다.

LG그룹도 이번 CES2023을 통해 글로벌 산업계에 올레드 TV와 전장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된 경쟁력을 재확인해냈다. 올레드 TV 10주년을 맞아 내놓은 선없는 TV 시그니처 올레드 M에 글로벌 관계자들 관심이 이어졌고, 특히 처음으로 오픈 부스를 운영한 LG이노텍은 예년보다 고객사 미팅을 2배 이상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밖에도 CES2023에 참가한 스타트업과 국내 지자체들 역시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MOU를 맺으며 세계화에 힘을 실었다.

/김재용 기자 juk@

쌀·쇠고기 등 33개 성수품 매일 물가조사

통계청, 설 앞둔 20일까지 실시
“민생 안정대책 지원 자료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인 쌀·쇠고기·치킨 등 33개 품목에 대한 물가 조사가 매일 실시된다.

통계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일일 물가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설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일일 단위로 조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쇠고기·조기·과일 등 농축수산물 21개, 밀가루·두부 등 가공식품 5개, 석유류 3개, 삼겹살·치킨 등 외식 품목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4개 등

총 33개 품목이 대상이다. 토, 일을 제외한 평일 10일 동안 방문(면접)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통계청은 “성수품 수급관리 등 정부의 설 민생 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조사 협조를 당부하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정보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주 52시간제 업종·특성맞게 유연화 추진

>> 1면 ‘깜깜이 회계 차단’서 계속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재정·회계 투명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노조는 이 기간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 운영 자료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공개 비치하고, 이행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별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분기·반기·연’으로 바꾸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권고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충분한 휴식을 보상받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정년연장’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안도 2월 중 마련한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 대상으로 신용 제재, 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책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